
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상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7. 1.

발 의 자 : 유상범 · 정진석 · 한기호
김태흠 · 김용관 · 임이자
김성원 · 김도읍 · 배준영
이철규 · 권성동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.

그러나 폐광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 추진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폐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심기구가 없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개발사업 추진이 미흡했고, 결국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실패했음.

이에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, 시행,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

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해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 동 법률안은 당초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, 법 적용을 받는 폐광지역의 지역경제가 좀처럼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, 대체산업 육성 등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「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의 적용을 받는 새만금 개발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의 제주도 개발과 같이 법 적용의 시한을 두지 않고, 안정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.

따라서 동 법률안의 적용시한을 삭제함으로써 폐광지역 주민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고자 함.

아울러 동 법률안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저히 낙후되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2조, 제3조의2 신설,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

안」(의안번호 제126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부터 제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,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.

1. 폐광지역의 개발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2.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·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
3.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
4. 첨단지식산업, 물류산업,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
5. 의료,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
6. 토지·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·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
7.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
8.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
9. 도로·항만·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
10. 개발사업(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. 이하 같

다)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11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조의3(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) 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(이하 “발전지원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추진사업의 발굴·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3. 폐광지역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

4.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폐광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및 시장·군수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

5. 각종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
의 활용에 관한 사항

6.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

7.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

8.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
조정 등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발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
구성한다.

③ 발전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
다.

1. 기획재정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국토
교통부장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

2. 폐광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및 시장·군수

3. 산업·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발전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
며,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지원위원회의
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조의4(폐광지역 발전추진지원단) ① 발전지원위원회의 폐광지역 경

제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추진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 및 사업의 총괄·조정·관리·지원
2. 관계 기관,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
3.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사업 발굴 및 추진
4.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및 지역별 추진사업 평가 및 점검
5. 재원조달 및 관리
6. 그 밖에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지원단은 전담조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조의5(기초조사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계획, 제2조의6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, 또는 제13조의3에 따른 개발센터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자연생태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·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토지 출입과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.

제2조의6(사업계획 승인 등)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

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착수 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4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
⑥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3조제3항 전단 중 “국무회의의 심의를”을 “발전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”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) 기획재정부장관은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3조의2·제13조의3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의 설치) 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(이하 “개발센터”라고 한다)를 설립한다.

②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하며,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,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④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제13조의3에 따른 개발센터 시행계획의 수립·집행

2.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토지의 취득·개발·비축·관리·공급 및 임대

나. 개발센터에서 개발·관리하는 관광단지·산업단지·첨단지식산업·물류산업·금융산업·건강산업의 육성·지원 및 주택사업 조성·관리

다. 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·산업단지·첨단지식산업·물류산업·금융산업 조성·지원

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

3. 폐광지역의 토지·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·개발 및 보전 사

업

4. 폐광지역 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

가.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

나.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·안내·홍보·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
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

다. 그 밖에 내·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5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폐광지역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
⑥ 개발센터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.

1.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
2. 차입금(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)

3. 그 밖의 수입금

⑦ 개발센터는 제6항제2호에 따른 차입금을 재원으로 조달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센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한다.

1.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
2. 경영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

3. 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
⑨ 개발센터가 해산하는 경우에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⑩ 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13조의3(개발센터 시행계획) ① 개발센터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개발센터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개발센터 시행계획의 내용,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센터 시행계획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.

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센터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(도로, 상·하수도, 통신,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한다)

의 구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광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23조의2(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용할 수 있다.

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1조제5항에 따른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
2.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자에게 「법인세법」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법인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
3. 관광진흥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
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5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6. 정부의 보조금
7. 차입금
8. 그 밖의 수입금

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향토문화와 문화재의 보존·관리를 위한 자금
2.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
3. 생활환경개선·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
4.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

5. 교육·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
6.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
7.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
8. 특별회계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자금
9. 그 밖에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자금

제23조의3(차입금)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.

②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

제23조의4(잉여금의 처리)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.

제23조의5(예비비)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23조의6(세출예산의 이월)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「국가재정법」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센터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발센터 설립위원회(이하 “설립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설립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설립위원회 위원장은 설립위원회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.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업무 보좌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개발센터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발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개발센터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, 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되고 설립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2조의2(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,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폐광지역의 개발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</u> <u>2.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·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</u> <u>3.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</u> <u>4. 첨단지식산업, 물류산업,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</u> <u>5. 의료,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</u> <u>6. 토지·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·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</u>

7.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
지에 관한 사항

8.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
의 진흥에 관한 사항

9. 도로·항만·정보통신 등 사회
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

10. 개발사업(종합계획에 따라
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.
이하 같다) 등에 필요한 투자
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
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11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사항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
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
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
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
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
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
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
라야 한다.

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
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2조의3(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)

회) 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(이하 “발전지원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추진사업의 발굴·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3. 폐광지역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

4.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폐광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및 시장·군수 간의 의견조정
정에 관한 사항

5. 각종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

6.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

7.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
경제개발센터의 사업추진과
발전방안

8.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
경제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
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사항

② 발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
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
으로 구성한다.

③ 발전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
국무총리가 되며, 위원은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
는 위촉한다.

1. 기획재정부장관, 문화체육관
광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
관, 국토교통부장관, 그 밖에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
정기관의 장

2. 폐광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
및 시장·군수

3. 산업·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
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발전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

<신 설>

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조의4(폐광지역 발전추진지원

단) ① 발전지원위원회의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추진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 및 사업의 총괄·조정·관리·지원

2. 관계 기관,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

3.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사업 발굴 및 추진

4.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및 지역별 추진사업 평가 및

<신 설>

점검

5. 재원조달 및 관리

6. 그 밖에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
를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지원단은 전담조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조의5(기초조사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계획, 제2조의6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, 또는 제13조의3에 따른 개발센터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자연생태

<신 설>

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·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토지 출입과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.

제2조의6(사업계획 승인 등)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

들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
부 장관의 시행승인을 받거나
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
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
다.

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
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
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
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
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
출하여야 한다.

④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
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
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
한다.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장
관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
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
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
다.

⑤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
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4항
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
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

제3조(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)

①·② (생략)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지정된 진흥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
⑥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3조(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발
-----전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---
-----.

-----.

④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조의2(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) 기획재정부장관은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3조의2(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의 설치) 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(이하 “개발센터”라고 한다)를 설립한다.

②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하며,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,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④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제13조의3에 따른 개발센터 시행계획의 수립·집행

2.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토지의 취득·개발·비축·관리·공급 및 임대

나. 개발센터에서 개발·관리하는 관광단지·산업단지·첨단지식산업·물류산업·금융산업·건강산업의 육성·지원 및 주택사업 조성·관리

다. 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·산업단지·첨단지식산업·물류산업·금융산업 조성·지원

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

3. 폐광지역의 토지·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·개발 및 보전 사업

4. 폐광지역 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

가.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

위한 마케팅 및 홍보

나.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·안내·홍보·조사와 민원 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

다. 그 밖에 내·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5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폐광지역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
⑥ 개발센터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.

1.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
2. 차입금(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)

3. 그 밖의 수입금

⑦ 개발센터는 제6항제2호에 따른 차입금을 재원으로 조달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률에서 정

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센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한다.

1.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
2. 경영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

3. 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
⑨ 개발센터가 해산하는 경우에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⑩ 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13조의3(개발센터 시행계획) ①

개발센터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개발센터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개발센터 시행계획의 내용,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센터 시행계획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.

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

<신 설>

발센터 시행계획에서 정하는
개발사업의 기반시설(도로, 상·
하수도, 통신, 에너지공급시설
등을 말한다)의 구성에 필요한
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광
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
원할 수 있다.

제23조의2(폐광지역경제활성화
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) ① 산
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
의 경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
추진하기 위하여 폐광지역경제
활성화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
계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용할 수
있다.

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
호와 같다.

1. 제11조제5항에 따른 금액 중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
금액

2.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
받은 카지노업자에게 「법인
세법」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
법인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비율의 금액

3. 관광진흥기금 중 대통령령으

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

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
출연금

5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6. 정부의 보조금

7. 차입금

8. 그 밖의 수입금

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
호와 같다.

1. 향토문화와 문화재의 보존·
관리를 위한 자금

2.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
금

3. 생활환경개선·보건위생 및
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

4.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
을 위한 자금

5. 교육·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
위한 자금

6.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
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
융자금

7.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
자금

8. 특별회계의 관리·운영에 필
요한 자금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9. 그 밖에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
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사업에 드는 자금

제23조의3(차입금) ① 특별회계의
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
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
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
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.

②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
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
을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
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
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

제23조의4(잉여금의 처리) 특별회
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
도의 세입에 이입한다.

제23조의5(예비비) 특별회계는 예
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
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
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
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
다.

제23조의6(세출예산의 이월) 특별
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
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

<p>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개발지원 에 관한특별법 부칙 ②(適用時限) 이 法은 2025년 12 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은 「국가재정법」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개발지원 에 관한특별법 부칙 <삭 제></p>
---	---